

## 백낙청

# 『흔들리는 분단체제』, 『분단체제 변혁의 공부길』-창작과 비평사

김동춘(성공회대학교, 사회학)

백낙청교수의 『흔들리는 분단체제』(1998, 창작과 비평사)는 한반도의 분단에 관한 그의 지속적인 관심과 문제제기를 새롭게 정리한 최근 저서이다. 이것은 1994년에 펴낸 『분단체제 변혁의 공부길』의 후속편이라 할 수 있는데, 후자에 관해서는 이미 여러곳에서 논평된 바도 있고 해서 여기서는 주로 그의 최근 글들을 모은 『흔들리는 분단체제』를 중심으로 하여 그의 ‘분단체제론’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흔들리는 분단체제』에서는 그의 분단체제론을 90년대 중반 이후 우리사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쟁점들과 연관시키고, 김일성 사망 그리고 최근 IMF 사태 이후 한국이 당면한 위기와 개혁의 과제 속에서 위치짓고 있어서 분단체제론의 내포와 외연을 확장하려는 시도가 매우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그의 분단체제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분단체제변혁의 공부길』을 이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함께 논평하는 형식으로 글을 정리하고자 한다.

백교수는 87년 6월 항쟁 이후부터 분단을 ‘구조’, ‘모순’으로 보기 보다

는 ‘체제’로 볼 것을 제안해왔다. 그는 사실 “혼자서 피리붙고 나팔붙고 이따금 옆질러 질받는 형국”이라고 표현하였듯이 사회과학자들이 해야 할 작업을 자신이 하고 있으며 사회과학자들이 자신의 이론이나 주장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있거나 곡해하고 있다는 불만을 자주 토로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계속되는 불만 표시와 연구 확대 제안에도 불구하고 사회과학계에서 분단체제에 대한 관심은 별로 확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그의 작업이나 문제제기가 무의미해서라기 보다는, 세계 자본주의의 물결과 신자유주의 개혁의 엄청난 파도 속에서 이제 북한 혹은 분단이라는 것이 우리의 직접적인 삶을 좌우하는 변수로서의 비중이 약화되어 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그나마도 통일이나 분단 문제에 관심을 갖는 학자들은 거의 그가 비판하고 있는 입장들을 견지하고 있는 - 반외세 통일론, 민주주도 변혁론 - 사람들로 제한되고 있고, 20대나 30대 초반의 신진 연구자들은 아예 북한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의식하지 않은 채 우리사회를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분단체제의 현존이 낡은 세대의 고집이 아니라 진행되는 현실의 일부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그의 노력은 매우 경탄할 만한 것이지만, 동시에 그것이 자주 논의되거나 주목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은 그 자신을 비롯한 7, 80년대 민주화운동 세대들이 분단을 오늘의 사회, 경제 문제와 적절하게 연결하는데 별로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역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우선 백교수의 분단체제론을 매우 난해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독자들을 위해 그의 분단체제론이 강조하는 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의 분단체제론의 제기는 분단 혹은 분단 극복으로서 통일운동에 대한 80년대의 두 이론적 실천적 흐름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하고 있다. 즉 그는 한반도의 분단을 식민지화와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보고 통일을 곧 ‘외세의 축출’로 보는 한편의 시각과 동서냉전으로 인한 남북한의 이념대립 혹은 ‘남한의 계급지배의 전일적 구조’를 곧 분단의 본질로 파악하면서 통일이라는 것은 남한에서의 변혁과 동일시하거나 남한 변혁 이후의 과제로 보는 다

른 한편의 시각을 비판하고 있다. 백교수는 전자에 대해서 남북한의 통일을 가로막는 것이 단순히 외세의 지배라 볼 수 없으며, 남북한의 국가와 그 지배계급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다는 점, 그리고 북한을 반외세 운동의 보루이자 자주성의 상징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어서 비판하고 있다. 또한 후자에 대해서는 남북한이 상호적대하면서도 동시에 각각의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분단상황을 활용하고 있는 독특한 국가 간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남한을 독자적인 사회구성체로 설정할 수 없을 뿐더러, 따라서 남한만의 변혁을 추구하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기획이라고 보면서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두 입장은 그가 제시하는 '분단체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 파악에서도 과학성을 결여하고 있을 뿐더러 변혁의 전략에서도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남북한이 별개의 국가이면서도 동시에 민족의 통일의 당위성을 이데올로기적으로 내세우는 독특한 상호적대/상호결합의 굳건한 결합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보면서 이것을 '체제'(system)로 볼 수 있다고 제안한다. 그는 이 분단체제가 한반도 내부에서의 갈등과 적대의 역사 속에서 형성된 역사적 실체이기도 하지만 세계 자본주의의 작동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세계체제의 하위체제로 존재한다고 보고 있으며, 세계 자본주의의 압력은 이 분단체제를 매개로 하여 남북한 각 국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이 분단체제는 단순히 적대적 국가간의 대결의 체제가 아니라 개별 국가 내부에서는 분단 이데올로기를 명분으로 한 지배체제이며, 남북한 양측의 지배계급이 내세우는 각각의 분단 이데올로기는 남한의 반공주의와 북한의 김일성주의로 집약될 수 있는 바 양자는 민족의 통일을 내세우면서도 기실은 남북한 지배계급의 기득권 유지에 봉사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분단체제 하에서 남북한 민중은 모두 공통의 이해관계, 즉 분단의 극복이라는 과제에 있어서 동일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분단 극복을 위한 운동은 외세축출, 남한의 변혁이라는 비현실적인 과제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이 분단체제를 허물기 위한 남북한 민중의 자기사회 민주화와 개혁의 노력에서부터 출발

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고 있다.

그의 분단체제론이 기존의 사회구성체론 혹은 통일론과 차별적인 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그가 굳이 분단체제라는 개념을 고집하는데서도 잘 드러나지만 그는 분단을 기존의 계급 모순, 민족모순과 분리된 별개의 모순으로 보기보다는 다른 사회적 모순과 얽혀 있으면서 남북한 각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현실을 통칭하는 상위의 현실로 바라본다. 즉 분단은 남북한 간의 군사적 대결로만 현상화되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 분단체력이 체제유지를 위해 동원하는 각종의 이데올로기와 그것을 기초로 한 체제유지의 정치사회적 과정을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시각은 선민주 후통일, 선통일 후변혁이라는 기존의 통일론들이 분단이 사회경제적 모순과 얽혀 있는 점을 보지 못한다는 비판과 일맥상통한다.

둘째, 그는 분단체제의 극복과 통일을 분리하고 있으며 분단체제의 극복을 사회변혁의 한 과정으로 바라본다. 그는 '분단없는 분단체제'가 현존할 수 있다고 본다. 그것은 바로 남북한이 하나의 국가로 형식상으로는 통일이 되더라도 실제로는 분리된 사회로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과제는 단순한 통일이 아니라 분단체제의 극복”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가 남한에서의 지역주의, 환경 생태 문제와 여성 문제를 분단체제와 연결시켜 보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셋째, 그는 분단체제를 세계체제의 하위체제로 보기 때문에 세계체제의 영향과 규정력을 염두에 두지 않는 분단극복론이 대단히 공허하다고 보고 있으며, 동시에 분단체제의 변혁은 이러한 세계체제의 작동 과정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으며 동시에 분단체제의 극복이 세계체제의 변혁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고 본다. 그것은 곧 세계 자본주의가 압도적인 규정력을 발휘하는 가운데, 그것과 완전한 단절을 전제로 한 변혁전략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는 현실주의적 입장에 기초해 있다. 한편 이런 이유 때문에 그는 오늘의 시점에서 통일과 분단체제 극복의 과제가 1945년 무렵 한반도에서 제기되었던 통일된 국민국가 수립을 의미할 수 없으며, 근대의 모순을 극복한 그리고 단일

혈통 국가라는 신화로부터 벗어나는 새로운 근대극복의 지향을 갖는 국가수립을 의미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최근 북한의 식량난과 남한의 IMF 대환란이 겹쳐서 남북한의 분단체제는 심하게 요동하고 있다고 본다. 그는 안보와 성장이라는 두 이데올로기가 분단체제를 유지하는 논리적 기반이 되었다고 보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남한이 추구하는 경제회복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론이 이러한 분단체제를 건드리지 않은 채 추진되는 한 별로 성공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 위기에 처한 분단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남북한 민중 나아가 자본이나 정부층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대안으로 그는 단순한 북한동포돕기의 식량지원이 아닌 분단체제 허물기로서의 북한 민중과의 연대를 지향하는 식량지원 운동이나 남한에서의 생활차원에서의 민주화운동, 여성운동, 환경운동 등을 통한 분단체제 극복의 일상화 작업은 물론 세계민중과 함께 근대 세계체제의 한계를 근본적으로 넘어서기 위한 운동들을 제시하고 있다.

백교수는 그의 작업이 한편으로는 사회과학자들이 본격적으로 이 작업에 뛰어들도록 유도하는 비전공자의 '외도'라고 낮추어서 말도 하지만, 동시에 사회과학자들이 자신의 주장과 이론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들의 이론적 무능력, 인문학적 상상력의 부재를 질타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의 작업은 분단 혹은 분단에 틀지워진 남북한 사회를 보는 하나의 사회과학적 이론으로 굳건히 자리잡고 있으며, 그의 시각이 기존의 사회과학자들이 제대로 보지 못했던 측면들을 밝혀주는 측면이 대단히 많다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도 주장하듯이 그의 분단체제론은 70년대 민주화운동과 진보 학계의 정서 속에서 길러진 분단모순론/통일민족주의론에다 월러스타인의 세계체제론을 얹어놓은 양상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양자가 갖는 한계를

---

1. 김동춘, 『한국사회과학과 장비 30년』, 『한국사회과학의 새로운 모색』(창작과비평사 1997) 420-421쪽.

고스란히 간직하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필자는 다른 지면에서 짧게나마 그의 분단체제론이 갖는 장점과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는데,<sup>1)</sup> 그 지면에서 제시하지 못했던 사항들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필자는 분단체제론이 갖는 가장 큰 문제점은 '세계체제의 하위단위로서 분단체제'라는 개념설정에서도 이미 나타나고 있지만, 남북한의 사회 체제의 차이를 과소평가하고 사실상 양 사회를 대칭적으로 본다는 점에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백교수는 남북한을 대칭적으로 보지는 않으며 남북한 사회와 각 사회에서의 지배체제와 민중간의 역학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분단체제론을 90년대 이후의 변화되는 남북한 사회를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이러한 점이 드러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월러스타인의 세계체제론이 그러하듯이, 사회주의를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하위체제로 볼 경우에는 기존의 사회주의의 독자적인 존립 불가능성을 지적하는데는 도움을 주지만, 그 사회의 내적인 재생산 과정과 사회구성체의 특징은 무시되기 쉽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에 포위되어 있었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회주의의 성장과 쇠퇴의 과정은 그러한 세계체제적 시각으로는 파악되지 않는 사회 내적인 동력을 갖고 있었음에 틀림없고 그러한 역학이 붕괴 이후의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아직도 존재하는 사회주의 국가이다. 북한을 국가사회주의, 유일체제, 봉건국가라고 부른다고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체제가 사회주의 원리에 의해 작동된다는 사실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백교수의 이론에서는 북한과 남한과 같은 차원에서 하나의 국가이며 그 안에는 지배와 민중의 대립이 존재한다는 지적 이상으로 북한 사회에 대한 구체적 규정, 북한의 지배계급과 민중(만약 이 개념을 북한에도 적용할 수 있다면)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워낙 예민한 주제이기도 하나 그 동안 그가 주도해온 『창작과 비평』의 지면에서 북한을 다룬 논문을 거의 발견할 수 없는 것도 주목할만한 일인데, 분단체제가 남북한의 사회성격을 문제 삼지 않는 추상적인 비유나 은유이면 모르되 하나의 사회 '이론'으로 성립하

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국가, 그리고 북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즉 백교수는 기존의 분단 이데올로기 즉 안보의 논리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바로 새로운 안보의 논리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처럼 남한의 반공 이데올로기의 논리적 근거가 북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에 입각하고 있는 마당에 어떻게 북한사회에 대한 규정 없이 분단체제론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사회주의 이후에도 분단이 존속하는 이유는 북한의 건재이며 그것은 분단의 '체제'적 성격에 기인하기 보다는 다분히 분단 과정과 한국전쟁 더 거슬러 올라가 일제하 민족해방운동의 역사에서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북한 지배계급이 현재의 지배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그리고 주민들의 역사적 경험과 체제정당화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어떻게 생각하면 북한은 '피지배'라는 개념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배계급과 민중이 일체화되어 있는 사회라는 인상도 주지만, 동시에 과거 소련, 동구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일단 체제가 붕괴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백교수가 기대하는 '민중'으로의 행동보다는 한국의 자본축에 훨씬 포섭되기 쉬운 시장추종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것은 북한의 체제 정당성 즉 반외세민족해방의 이념이 무너질 때일 것이다. 그렇다면 남 북한 민중의 연대라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기대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그가 비판하는 외세축출론, 남한변혁론보다 오히려 더 비현실적일 가능성이 높다. 즉 현실 사회주의로서 북한사회에 대한 인식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통일은 물론 궁극적으로 분단체제의 극복에서 하나의 큰 축을 형성하고 있는 북한의 체제 위기의 가능성을 무시한 채 논의를 전개할 위험성을 갖고 있다.

한편 세계 '체제'론이 그러하듯이 분단체제론 역시 구조와 행위를 포괄하는 이론이라기 보다는 다분히 구조에 방점을 두는 이론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 '분단체제'의 성립사를 전제한 상태에서 그 해소의 전망을 보여주기보다는 구조의 재생산에 주로 관심을 갖고 있다. 분단체제라는 것이 어느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닐진데 그렇다면 그것은 과연 언제, 어떻게 시작

되었는가, 북한이 다소 유리한 입지에 있어서 힘으로 남한을 제압하려 하였던 70년 이전 시기도 분단체제라 말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만약 분단체제를 일정한 시점에서 시작된 것으로 본다면 과거의 분단과 오늘의 분단은 어떻게 다른가, 양자를 단절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필자는 지난 50년의 분단의 역사를 되돌아 보면 하나의 일관된 흐름을 가지면서도 초기 베트남형과 근접했던 시기나, 90년대 중반 이후 이후 독일형 분단과 근접해가는 시기로도 구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역사적 전개과정을 일률적으로 분단체제의 형성의 과정으로 본다면 남북한이 체제유지를 위해 동원하는 이데올로기의 변화나 체제정당화의 기반의 변화, 나아가 향후의 분단극복의 동력과 주체형성상의 변화를 제대로 추적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가 말하는 분단체제라는 것은 70년대 이후 한국의 민주화를 고민하던 사람들이 품어왔던 의혹(남북한 통치자들의 야합구조)을 세계체제론의 힘을 빌어 이론화한 것이라고도 생각되는데, 남북한의 상호결합이 의혹을 일으킬 때는 손호철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행위자의 의도와 의지의 측면, 즉 정책의 측면이 강조되고, 동시에 그것의 극복의 가능성과 전망도 함께 논의할 수 있지만, 하나의 구조 혹은 '체제'의 개념으로 설명될 경우에는 재생산과 더불어 변혁의 문제는 오로지 세계체제의 외적 환경의 문제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게 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체제이론이 그러하듯이 분단체제는 스스로 작동하는 구조로 상징화되어 버리고, 그 내부에서의 변혁의 가능성은 북한의 경우에는 내부 지배층과 민중의 갈등 표출의 기대로, 남한의 경우에는 사회 변혁의 분명한 대안제시나 목표보다는 오히려 제도적 틀 내부에서의 제안이나 정치권력의 결정적으로 위협하지 않는 '운동'만이 대안으로 제시되는 결합을 갖고 있다. 결국 분단체제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첨예한 권력관계와 계급관계로 존재할 터인데, 그러한 질서를 변혁하려는 운동에 대한 강조점과 절박성은 현저히 떨어진다든 것이다.

분단체제가 세계체제의 하위체제라는 것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서 넘



어갈 수도 있으나 분단체제 극복의 문제와 관련해 보면 그 문제점이 보인다. 월러스타인의 세계체제는 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라는 하부구조를 지칭하는데, 분단체제라는 것은 다분히 정치, 군사, 사회구조의 상부구조를 지칭하기 때문이다. 만약 자본주의 세계체제를 오늘의 자본의 세계화로 연결시켜 본다면, 사실 분단체제라는 것은 오늘의 시점에서 보면 자본주의 세계체제보다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군사정치적인 체제, 즉 동북아의 정치군사질서의 유지와 관련되어 있을 것이나 세계 자본주의의 유지, 확대재생산 과정에서는 별다른 변수가 아닐 수도 있다. 따라서 “분단체제를 허무는 것이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것보다 훨씬 뜻 깊은 성취”라는 규정은 80년대의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 타당할 수도 있으나 오늘의 시점에서는 다소 과장이 섞인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미국의 세계자본과 APEC과 EAEC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일본이 과연 한반도에서의 분단의 유지에 사회적 이해를 갖고 있는가의 문제가 될 것인데, 역으로 이제 자본주의의 점진적인 분단체제의 극복은 오히려 자본주의 세계체제와 미국이 바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이다.

분단체제의 성격과 지위에 대한 이러한 문제점은 결국 분단의 극복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개념적인 정의의 문제와 연관된다. 백교수는 통일과 분단체제 극복을 구별하면서 어느 한 체계로의 통합이 곧 분단극복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물론 분단은 종족적(ethnic) 입장에 입각한 ‘민족’의 통일로 해소되어서는 곤란하며 그렇게 될 경우 새로운 비극을 낳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과거 외세축출 통일론이 노동자를 비롯한 한국의 민중을 설득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국 정부가 주장하는 “통일이라고 다 좋다고 볼 수 있는가”라는 공격에 대해 정면으로 맞부딪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즉 백교수도 강조하고 있듯이 통일 후 건설될 사회에 대한 상을 전제로 하지 않는 통일론은 ‘반대와 투쟁의 담론’이 될 수 있을지 언정,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는 이론이 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백

교수의 이론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난다.

그가 제시하는 분단의 극복이란 사회변혁을 포함하는 것인데, 그는 자본주의 세계체제 하에서 사회변혁은 자본주의 체제를 용인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현존 자본주의 세계질서 하에서 한반도라는 좁은 지역에서 그것을 넘어서는 변혁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현실적인 판단이 전제되어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의 분단체제의 극복은 두 가지로 해석 가능하다. 하나는 모순을 안고는 있지만 남북한의 이질성과 차별성이 해소되는 자본주의 사회, 둘째는 남북한 사회의 통합 보다는 보다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혹은 민주적 자본주의 질서의 수립이다. 여기서 전자는 기존의 반외세 통일론과 유사하며 후자는 남한변혁 통일론과 근접해 있다. 남한의 자본도 분단체제 극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그가 말할 때에는 전자를 말하는 인상을 주다가도 분단체제 극복을 '변혁'의 과정이라고 말할 때는 후자를 말하는 인상을 준다. 때로 그는 분단체제 극복과 통일을 동일시 하는 경우도 발견되는데, 이것은 그가 결국 분단체제 극복의 구체적 상을 잡기보다는 분단체제의 극복 그 자체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데서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그런데 통일이후에도 분단체제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통일 이후 정치 경제 사회통합의 지연을 의미할 것이므로 그것을 분단체제의 지속이라고 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별로 유용성이 없다. 이것은 그가 '민족주의'를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70년대의 분단모순론/ 통일민족주의론의 시각을 어느 정도 깔고 있다는 것을 새삼 환기시켜 주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각은 분단의 극복, 통일을 여전히 하나의 관념으로만 받아들이기 수밖에 없는 90년대의 청년들에게는 이해불가능한 제안으로만 다가올 것이다. 이점에서 지역주의, 여성, 환경의 문제를 분단의 극복의 과제와 연결시키는 그의 작업은 대단히 주목할 만하지만, 아직은 일상적 실천이 어떻게 분단극복의 문제와 연결되는지,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분단극복이 왜 이루어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하기가 어려워지고, 통일과

분단극복의 사회적 성격에 대한 연결은 당위 혹은 이상으로만 제시된 감이 있다. 그나마도 사회운동이라는 것이 활성화된 남한의 경우에는 그러한 접맥의 노력이 의미있겠지만, 북한의 경우는 우리의 통제 영역 밖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게 된다. 이점에서 그의 분단체제론은 남북한 민중의 연대라는 과거의 논의에서 남북한 정부, 민간을 포함한 우리 민족의 문제로 점점 더 축소시키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민족, 민주주의 이념을 계급보다는 우선시하였던 70년대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의 사고의 연장이지만, 다른 편으로는 자본주의의 모순은 세계체제의 탓으로 돌리고, 분단은 우리 민족 내부의 문제로 점점 더 국한시키는 그의 세계체제론적 사고의 연장이기도 하다.

우리는 백교수의 분단체제론이 한국사회를 분단이라는 체제연관 속에서 파악하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그가 분단극복 운동이 “양 정권과 전적으로 우호적이거나 적대적일 수 없다”라고 밝힌 것이나 재벌체제가 없어진다는 것을 암암리에 전제 하에서 “‘대기업’ (방점 필자)의 몫을 배제한 통일은의가 한갓 관념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데서 드러나듯이 남한 자본 주도로 ‘통일’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은 이 시점에서 이제 남한의 ‘자본주의’의 개혁 일반의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목소리를 낮추고 있다. 만약 통일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어떤 통일인가”가 점점 더 문제가 된다면 그의 분단체제론의 비중은 더욱 남한사회 내적인 문제로 관심을 돌려야 마땅할 것이다. 따라서 과거 분단세력으로 지목되던 재벌이 대북 교류를 주도하고 ‘통일’의 주역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오늘의 정치경제적 현실을 인정한다면라도 자본 주도의 통일이 초래할 문제점에 대한 경계와 비판이 없이는 ‘분단체제’ 극복은 실제의 내용으로는 그 동안 필부들이 말해온 바 남북한 양자책임론, 남북한 화해론과 사실상 동일하게 되어버리게 되고 더 이상의 계속되는 이론적인 논의나 사회운동도 무의미해질 위험성이 있다. 